

“반도체·車산업, 美자유주의 동맹 불참팬 살아남을 수 있을까”

13면서 계속 □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 급증도 심각한 문제다. 고위험·취약가구 차주의 가계대출이나 실적 악화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났고 상당 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코로나19로 상환 능력이 훼손됐으니 더 어려울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상환을) 연기해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부채 조정이라고 해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노력이 전부다. 일종의 미세조정인데 근본 대책은 아니다. 일단 경제가 살아야 한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은 자영업자다. 자영업자가 살아야하면 코로나19가 잡혀야 한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중, 우선 방역을 확실하게 잡아야 경제도 잡힐 수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통한 정상화뿐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지원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데.

“위기라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믿는 건 실제 현금이다. 특히 보면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좋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증명됐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은 당연히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경우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다. 각종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에는 누가 더 절박하게 필요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있고, 이에 따른 선별 지원이 훨씬 효율적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은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디지털세 등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을 주장해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는 법인세를 대폭 낮춰 기업 경기를 활성화했다. 트럼프 재임 중 최저 실업률 등 미국 경제가 좋았던 것은 맞는다. 지금 미국은 1조9000억 달러 긴급 지원, 2조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등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단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법인세를 계속 올렸다. 이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당분간 낮출 개연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이를 적용받는 우리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1%)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3.7%), 일본(-4.8%) 등 주요국 성장률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자평한다.

ESG에 대한 생각

■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다. 부존자원 차이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선구자로 불리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13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ESG에 조심스럽게, 신중적으로 접근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미·중 갈등이 이념전쟁으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방파제로 활용해 중국의 경제압박을 견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낙중 기자

바이든, 트럼프 때와 달리 동맹 중심으로 中과 패권싸움...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

최대 수출국인 中과의 관계 ‘딜레마’지만... 결국 美 자유동맹이 방파제 역할 할 것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계속 떨어져... 다음 정부선 규제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이 필수

“홍보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핵심 이유는 기업이다. 기업이 선전한 것이다. 코로나19 와중에 대표적 수혜 산업이 된 게 반도체 분야다.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봐야 한다.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삼성 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다. 대만은 지난해 무려 3% 성장했다. 근 몇십 년 만에 대만이 중국 본토 성장률을 능가한 해로 기록됐다. 베트남의 경우도 지난해 플러스 성장했고, 올해 6~7% 성장 얘기가 나온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리던 나라다.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약진했고, 민간 주력 기업이 선전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조 바이든 시대에도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가에서는 미·중 대립을 완화하며 실리를 챙기는 ‘조율적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크다.

“현 정부가 곤혹스럽다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시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중국의 역할까지

감안하면 호혜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자유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쿼드(Quad, 미국·인도·호주·일본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형을 형성해가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정책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포지셔닝이 만만치 않게 된다. 특히 우리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 기동인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등과 관련해 우리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동맹에서 이탈해 국익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적극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와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문제점이 글로벌 공급망 부분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처럼 상당 부분이 중국 공급망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의 안보, 경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전략산업은 미국 또는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경쟁이 미래 경제 패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화웨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바이든 시대에도 더 걸면 더 걸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이 혼자 중국과 부딪혔다면 바이든은 동맹과 같이한다. 하나의 이념 전쟁으로 번지고 냉전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에 더 확실한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국민이 지난 4·7 재·보선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특히 20·30세대가 돌아섰는데.

“20·30세대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다. 앞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20·30세대가 미래에 짊어져야 할 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세대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걸맞은 재정 얘기만 한다. 20·30세대를 도와준다는 재정이 결국 그들을 옥죄는 뜻이 될 것이다. 20·30세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메시지가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동학개미’를 많이 언급하는데 주축이 바로 20·30세대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정책 기조는 친기업·친시장인 것이다. 그들이 바로 주주인데 기업이 잘되는 것을 원하지 ‘반기업’ ‘반시장’을 원하겠나. 이들은

공감할 실용적인 생각을 한다. 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가 투자하는 기업 주식이 오르는 정책이냐’ 아니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냐’와 같은 질문을 한다. 이들이 우리 경제의 주체고, 숫자로 보면 총 국민의 3분의 1 정도다. 이 세대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부 정책은 단기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다. 내 집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 계층 상승 사다리 문제, 좌절감, 일자리 등 현 정부 수뇌부가 보여준 공정의 문제, 위선적인 측면에 대한 실망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한 결과가 이번 선거였다. 결국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다. 당시 정부 대응과 현 정부 위기 대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

“초동대응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 초동대응의 원칙은 신속·충분이다. 초반에 파장을 최소화해야 내상이 적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초동대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대만, 뉴질랜드 등처럼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는데 초동대응 원칙에 맞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재정을 푸는 부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

이긴 했지만 거기에 걸맞게 정책 기조, 규제를 풀어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전염병 확산 차단이 우선이고, 결국 백신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접종률이 3%대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보자. 우리로서는 당시 외화 유동성 문제가 큰 이슈였다. 초동대응의 핵심은 시장 안정화였고, 결정적 타어라운드 미국과의 달러 통화 스와프였다. 그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반전의 한 방’이었는데,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2008년 10월 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1월 들어 뉴욕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IR)를 하러 가서 티머시가 이트너 당시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만났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연방 시스템 실제 자금의 80%를 결정한다. 내가 ‘통화 스와프 체결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가이너 총재가 ‘(스와프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최고위 측인 이명박, 조지 부시 당시 한·미 대통령 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더라. 위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결정적 한 방이 금융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줬던 셈이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에서 우리 대통령의 한 방은 무엇이었나.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규제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생산인구는 떨어진다는 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업 경제활동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원인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WB) 등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의 반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성장의 약한 고리로 오랫동안 지적됐다.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규제는 떨어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거꾸로 간 측면이 있다. 기업들을 뛰게 해줘야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반전시키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수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특히 광의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핵심이다. 보험료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다.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어려운 개혁을 해왔다. 반면,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자평하지만 재정을 풀어서 공공기관·공무원을 늘린 게 전부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이다. 민간 혁신 기업을 만들어 내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

“ESG 흐름 점점 커져도... 무작정 따르기보다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해야”

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SG는 기업 경영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 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며 국내에서도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ESG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이사장은 “2006년 유엔이 책임투자 원칙(UNPRI)을 통해 ESG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며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뤄졌다”면서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투자대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안정적 수익을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ESG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자 핵심 기준으로 ESG를 삼겠다고 할 정도”라며 “일각에서는 ESG 열풍이 시간이 흐르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는데 이번 ESG 흐름은 주요국, 기관에서 확산하고 있고 전 세계가 친환경 기조로 변화하는 데 방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주류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ESG를 계량화해 평가에 반영

해야 하는데 아직은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표준 정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이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예컨대, 친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태양광·풍력만으로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탈(脫)원전 속도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원전이 ESG 추진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고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진보·자연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결국 이념적 이슈가 아니다”라며 “ESG는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만 속도 조절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